

범죄의 뒷에 걸린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다른 측면의 피해자

✎ 김태형 기자 | ⓒ 승인 2025.11.10 17:05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일상의 범죄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노력 등으로 피해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며 그 수법이 얼마나 정교해 졌는지를 보여준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1년 2만9909건에서 2024년 1만8791건으로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같은 기간 1682억 원에서 380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사기 피해액은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해 '대출빙자형' 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의 박사훈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이제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검찰이나 경찰 로고가 찍힌 공문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심지어 앱 설치 요구까지 포함된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했다"라며 "소위 전달책, 인출책, 송금액조차 자신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맡았던 한 사건은 전국 여섯 곳의 관할에 걸친 수억 원대 피해 사건이었다. 주범들은 해외 조직망에 숨어 있었고, 단순히 전달이나 송금만 도왔던 의뢰인이 공범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송치 의견이 나왔지만, 검찰 단계에서 입증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고의 없음을 주장하였고, 보완수사를 거쳐 결과적으로 모든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며, "같은 사실관계라도 수사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중 상당수는 범죄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이다.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범죄인줄 모르고 가담하게 된 또다른 측면의 피해자도 여전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들은 소위 '계좌 복구'나 '수사 협조'를 이유로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이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속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될 수도 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 적용의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봤다.

박 변호사는 "더 안타까운 것은 주범이 해외로 사라지고 범죄에 속은 금전적 피해자와 범죄에 속아 가담하게 된 또다른 측면의 피해자만 남는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만 남고, 진짜 범인은 법망 밖에서 웃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나 금감원이 금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 문자나 이메일로 온 공문도 믿어서는 안된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기관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감염된 폰으로 전화를 걸면 어디로 걸든 범죄자에게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의심하는 습관'을 꼽았다. 또한 "'기밀 수사',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모든 범죄가 그렇겠지만,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의 본질은 ‘예방’이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또한, 전달책 등으로 연루된 이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처벌 받는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조직에 속은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이들이 또다른 측면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호인으로서 역시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단순한 변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사훈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castrol2128@gmail.com